
「소비자신용법안」

주요 내용

2020. 9.

금 융 위 원 회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| 1 |
| II. 추진방안 | 2 |
| III. 세부내용 | 3 |
| 1.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| 3 |
| 2.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| 5 |
| 3. 채무자의 연체·추심부담 경감 | 8 |
| 4.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| 11 |
| 5. 규율이행의 실효성 확보 | 13 |
| IV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| 14 |
| 〈 참고 〉 | 16 |

I. 추진배경

-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을 형성
 - ①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('02년), 법원 개인회생('04년) 등 채권자 집단적 채무조정 제도 구축
 - ② 추심자와 채무자간 접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「채권추심법」을 제정('09년)
 - ③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「대부업법」을 제정('02년)하고, 매입 추심업을 규율·감독대상에 포함('09년)
 - 이에 따라 추심질서 개선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, 개인연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·추심부담이 과도
 - ① 채무자가 신복위·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前* 조기에 채권 금융기관과 직접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
- *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연체채무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35개월('19년 기준)
- ② 「채권추심법」은 폭행·협박 등 특정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규율방식으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에 한계
 - ③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추심(추심위탁·채권매각)이 보편화되어 고객보호에 소홀해지고 회수에 치중한 추심관행 형성

◇ 대출 수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, 추심자, 개인채무자간 권리·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마련 추진

-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「대부업법」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, 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

➡ 「소비자신용법」으로 확대 개편(「대부업법」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)

II. 추진방안

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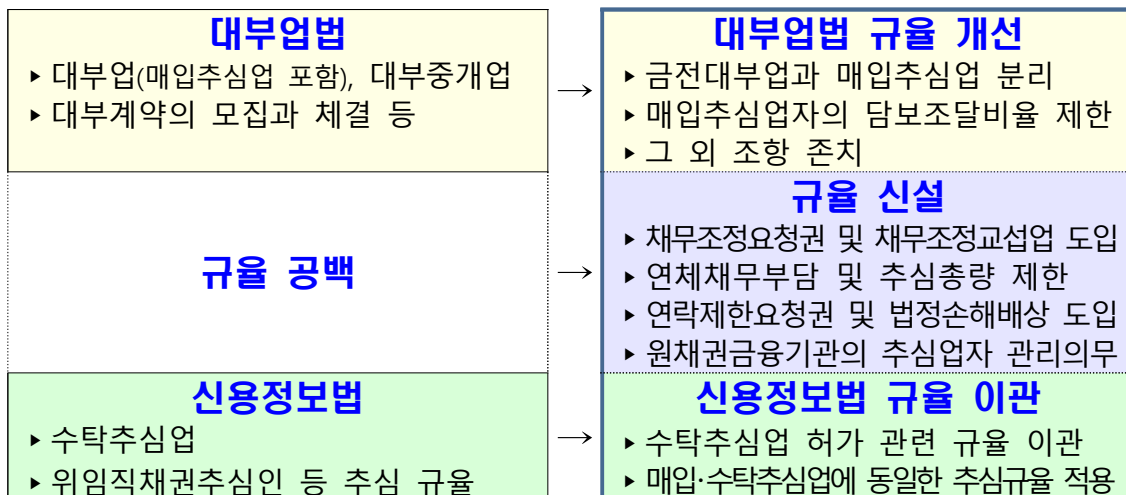
- ◇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 →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
 - 특정 행위를 금지·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
- ➡ 채무자의 추심부담·피해가 채권자와 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 형성 유도

주요 내용

-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**사적 채무조정 활성화**
 - *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등
- ②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**연체·추심부담 완화**
 - * 연체채무부담 한정, 추심총량제한,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
- ③ 채권금융기관의 **채무자 보호책임 강화**
 - * 수탁·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

법체계 개편

◇ 「대부업법」(전체) + 「신용정보법」(일부) + @ → 「소비자신용법」



Ⅲ. 세부내용

1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

◇ ‘개인채권’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반적으로 규율하되, 채권금액·담보유무에 따라 일부 규율을 차등하여 적용

① 개인채권에 대해 포괄 적용 (§2)

□ ‘개인채권’이란 ①채권금융기관이 ②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③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

① 채권금융기관은 (i)여신금융기관(금융업법)·대부업자(소비자신용법), (ii)보증기관(특별법), (iii)기타 채권자(매입추심자, 유동화전문회사 등)로 구분

② 소비자신용*은 (i)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부(카드·할부 포함), (ii)지급보증·보증보험의 대위변제, (iii)채권양수 등의 행위

*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금융업 영위과정에서 보유하는 채권을 모두 포괄

- 채권금액이 대통령령(이하 ‘령’)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「소비자신용법」(이하 ‘법’) 적용을 배제

③ 개인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*인 경우를 의미

*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 포함, 가계대출 외에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적용

② 담보부 개인채권은 일부 法규정 적용제외 (§3)

□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채권은 과잉추심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일부 法규정 적용을 배제

-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양도 前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 (§29·§32)
 - 다만, 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 실거주 주담대에 한하여 경매 前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화 (§37)
- 채권양도 前 이자면제, 채권양도 後 사후관리, 채권양수인의 재양도 前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* (§31·§33)
 - *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회수 가능 → 과잉추심 가능성이 거의 없음
-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및 적용 의무* (§51)
 - * 담보권 행사에 따른 회수가능성이 있는 한 소멸시효 중단(=시효연장) 실익 존재

③ 개인채권의 생성~소멸 등全过程을 대상

- ☐ (생성) 대부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최고금리 제한, 상환능력 심사 등 고객보호 조치 (§22~28)
- ☐ (변동) 기한이익상실* 및 채권양도시 준수할 사항 (§29~30)
 - * 통상 연체상태가 1개월(신용대출)~2개월(담보·보증대출)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대출원금 전체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구
- ☐ (추심) 채권자 본인(원채권금융기관, 매입추심업자), 수탁추심업자, 위임직추심인 등의 추심행위 및 추심위탁* 절차 규율 (§35~38)
 - * 통상 연체초반 직접추심 → 기한이익상실 후 추심위탁 → 채권상각 후 매각(양도)
- ☐ (상환) 원리금감면, 상환일정연장 등 채무조정 절차 (§44~46), 채무조정교섭업자 영업행위 (§47~50) 규율
- ☐ (소멸) 소멸시효 관리방법 및 시효완성의 효과 규율 (§51)

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(§4)

- ☐ 소비자신용 및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

◇ 채무자와 점점에 있는 채권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기 도모

① 채무조정요청권 일반절차 (§ 44~46)

-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
 -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,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(미제공시 접수거부 可)
-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,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·제안
 -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(연체기간 등)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
 - 다만,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 可
-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

②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 (§ 29·32·37)

-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 의무화
 -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

*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야 절차진행 가능

-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* 채권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진행 금지

*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통지한대로 절차진행 가능

- 1가구 1주택(일정금액 이하 실거주→숙)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 적용

- 채권금융기관이 숙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,
 -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
 -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(다만, 채무자 희망시 단축 가능)
-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절차와 효과는 상동

③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(§9~13, §47~50)

-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

-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·제출대행,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*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

*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와 접촉·협상 가능(본인명의로 채무조정약정 체결은 不可)

-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·대부중개업·매입추심업·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*의 겸영을 금지

* 法에 따른 5개 業 → ①(금전)대부업, ②대부중개업, ③채무조정교섭업(신설), ④매입추심업(현행 대부업에서 분리), ⑤수탁추심업(신용정보법에서 이관)

-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*,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,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

*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 외 제3자의 조력·대행을 불허→ 法 시행 후 개별 채무조정교섭업자와 협약을 맺어 서류작성·접수대행 허용 계획

□ 법인에 대한 등록제*로 도입

* 변호사가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직무로서 채무조정교섭업 수행시 등록의무 면제

- 등록요건으로서 자기자본(1천만원 이상→승), 영업보증금, 전문성(전문인력 확보, 교육이수), 물적설비·사회적신용(→승) 등 규정
-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승으로 정하는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
-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→ 3년마다 등록 갱신의무 부여(대부업·대부중개업·매입추심업과 동일)

□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수수료, 업무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율

-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가능한 수수료 내역 및 수준을 제한
 - 개인채무자로부터 ‘교섭수수료’ 및 ‘성과수수료’(채무조정 합의 성립 전에는 수취 不可) 이외의 대가 수취 금지
 - 총수수료 상한을 100만원의 범위에서 승으로 규정
-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 수취 可
 - *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함
-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의성실 의무 부과
 -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교섭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소득·재산 등 상환능력에 대한 거짓정보 전달 금지
- 채무조정요청권, 신복위·법원 채무조정제도, 수수료 등 개인채무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前 설명할 의무 부과
- 기타 개인채무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* 금지

* (예) 상환지체 유도·종용, 개인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조정 수락의사 표시, 고객의 채무상환금을 보관(escrow),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고객모집위탁 등

◇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연체기간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,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

① 기한이익상실 後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(§30)

-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토록 하고,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*(약정이자만 부과)

* 단, 관리·회수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가능

-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시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

※ [가상사례] 대출원금(잔액) 100 =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+ 미도래원금 90
 (현재) 100 x (약정이자+연체가산이자) 부과 →
 (개선) [10 x (약정이자+연체가산이자)] + [90 x 약정이자] 부과

② 개인채권 양도 前 장래 이자채권 면제 (§31⑤)

-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, 법인세법上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 부과(채무 무한증식)
- 상각 개인채권(대상채권 범위 → 승으로 규정)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*가 가능토록 개선

* 상각 이후 이자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채권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채권자가 매각(양도)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

- 채권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연체채무자에 대해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불합리 개선
- 연체채무자가 채권양도 이후 늘어난 이자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회수가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

③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(§51)

-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실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중단(=시효연장) 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할 의무
 -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를 평가한 이후에야 시효 중단행위(지급명령) 실행 可
 - 개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*할 의무
 - 해당 통지는 민법(§506)에 따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간주*
 - *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자의 고의적 시효이익포기(시효부활) 유도행위 방지
- ※ 민법 제506조(면제의 요건, 효과)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.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④ 추심 및 양도 금지 (§31·35)

- 개인채무자가 法에 따른 채무조정(§44), 신복위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 前까지는 추심·양도 모두 금지
 -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기 前*까지는 추심을 금지하나 양도는 허용
 - * 신복위가 채무조정 합의안에 대한 개인채무자의 변제상황을 관리 중(신복위 협약)
- 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양수인이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신용정보원)에 제공*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
 - * 채권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관련 정보(양도일, 양도금액,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)를 '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'(운영: 신용정보원)에 제공할 의무(신정법 §39의2)
- 기타 채권·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추심 또는 양도 금지
 - 소멸시효 완성채권, 채무자 사망채권(분쟁소지 없는 경우 제외), 채권 준부·금액을 소송·분쟁중인 채권 등은 추심·양도 모두 금지
 - 개인채무자가 채무확인서*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추심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추심 금지
 - * 원금, 이자, 비용,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채권추심법 §5①)

5 추심연락 총량제한 (§ 36②~⑥)

- 추심자의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고통(emotional distress)을 유발함에 따라 빈도를 제한
 -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*하는 것을 금지
 - * 방문 또는 말·글·음향·영상·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§8의2 등 준용)
→ 횟수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위는 승으로 규정
 -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, 수탁추심업자,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를 모두 합산
 -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(→승으로 규정)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 금지
 - * 단,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으로서 개인채무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등 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

※ 현재 「채권추심법」(제9조제2호 등)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적 연락을 금지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

6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(§ 36⑤)

-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·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
 -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할 의무

※ 가상사례(예시)

- ▶ 개인채무자가 '특정 요일의 14:00~18:00'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자가 다른 요일·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요청 수락
- ▶ 채무자가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 수락

- ◇ 연채채무자도 '고객'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통해 추심(추심위탁·채권양도)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책임 지속 부담

① 추심업자 선정 (§ 32~34, § 39·40)

-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(추심위탁시)·매입추심업자(채권양도시)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, 위법·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
-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매입 이후 채권자가 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준 전반*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
- * 채무조정 내부기준,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, 추심위탁/채권양도 내부기준 등
-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·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(위탁: 5영업일, 양도: 10영업일 전)

< 추심업자 평가요소 비교 >

| | 수탁추심업자(§39②) | 매입추심업자(§33①) |
|----------|--|--|
| 공통 요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심인력의 규모·전문성 민원내용·빈도, 민원처리체계 채권추심 관련 법 위반 내역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여부·내용 | 좌동 |
| 고유 요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거 채무조정 실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권 양수대금 조달방법 채무조정 내부기준 내용·현황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내용·현황 채권양도 내부기준 내용·현황 추심위탁 내부기준 내용·현황 |

② 추심업자 관리책임 (§ 33③, § 39③)

- 원채권금융기관*은 수탁·매입추심업자가 「소비자신용법」 및 「채권추심법」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함(→손해배상책임)
- *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
-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·매입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

③ 추심업자 업무 제한 (§ 31④, § 38)

- 개인연체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 채권을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의무화
-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업무를 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 금지*
 - * 수탁추심업자가 채무감면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종속심화와 과잉추심 노출확대 우려
- 다만,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단순히 집행*하는 업무의 경우는 예외(위탁 가능)
 - * 채무자와 채무의 특징에 따라 감면율이 자동결정되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감면을 산정·제시
- 채권금융기관이 수탁추심업자의 위법·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심 위·수탁 계약 취소 가능(계약에 미리 반영 의무화)

④ 추심시장 정비 (§ 5~8, § 18·19)

- '추심'이라는 동일 기능에도 불구하고, 수탁추심자(허가제)에 비해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은 매입추심자(등록제)의 진입규제 강화
 - 이해상충 방지와 과잉추심 유인 완화를 위해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(대부업→(금전)대부업+매입추심업)하고 겸영* 금지
 - * 매입추심업 984개 = 대부업 겸영 622개(63%) + 추심 전업 362개(37%) ('19년말)
 - 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담보조달비율*이 70% 이하 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
 - * 총 매입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한 자금의 비율
- 대출기관(저축은행, 캐피탈 등)은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한 대출 금지

※ 소비자신용관련업(5개)* 상호간 겸영 가능 범위 (→ 승으로 규정)

* 대부업, 대부중개업, 채무조정교섭업, 수탁추심업, 매입추심업

▶[대부업, 매입추심업] (현행) 겸영 可('대부업' 단일업) → (法 시행후) 겸영 不可

▶[대부업, 대부중개업] (현행) 겸영 可 → (法 시행후) 겸영 可

▶[채무조정교섭업(신설)] (法 시행후)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과 겸영 不可

◇ 채권자/추심자에게 부과된 의무(기준마련, 절차강화, 사후관리 등)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

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(§ 68)

□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주로 적용* → 제재 이력에 따라 추심자에 대한 시장평판이 형성되도록 유도

* (예) ▶ 채무조정요청권 안내의무(§44②) 위반 : 과태료,

▶ 개인채권 매각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무(§31⑤) 위반 : 기관 및 임직원 제재

□ 수탁·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 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담

○ 다만,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·매입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

② 법정손해배상 도입 (§ 69)

□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 배상(§68) 대신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(§69) 가능

○ 해당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

※ **법정손해배상**(Statutory Damages):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 실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·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배상액 규정

③ 영업보증금 적립 (§ 70)

□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법적책임*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(영업보증금 규모·예치방법 등은 승으로 규정)

○ 영업보증금은 해당금액 상당 보험금을 보장하는 증권으로서 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(Surety Bond)으로 대체 가능

* 손해배상책임(§68), 법정손해배상책임(§69), 승으로 정하는 금융분쟁조정결과에 따른 책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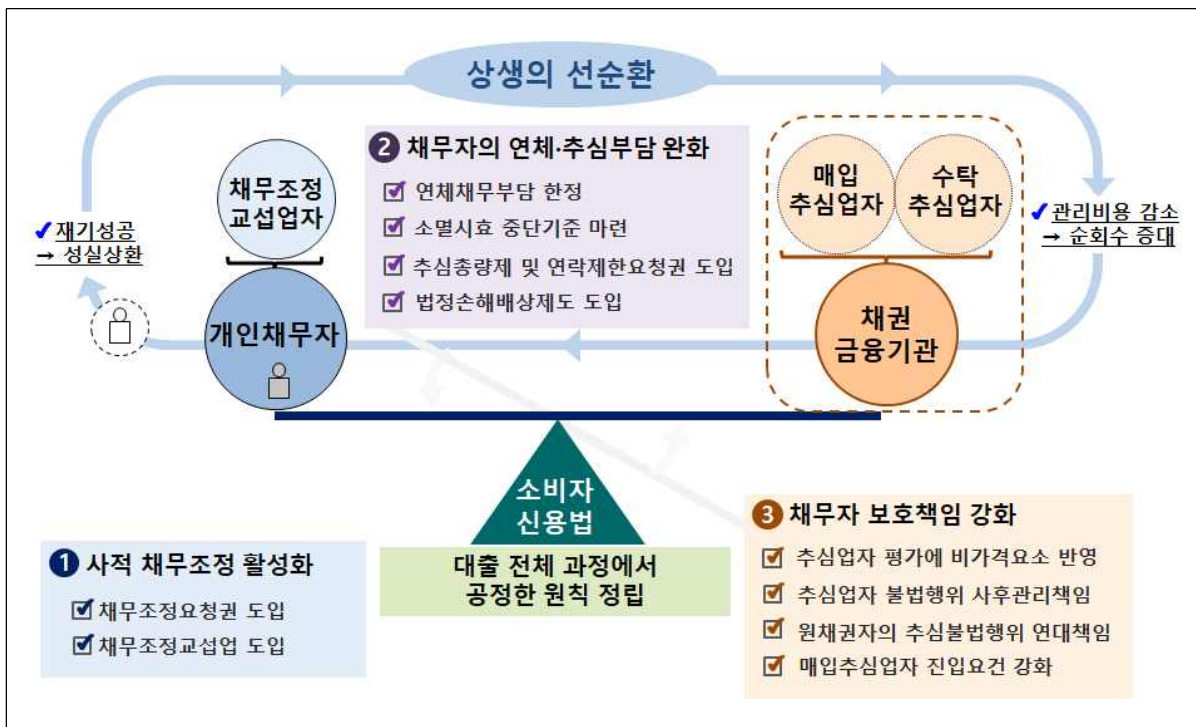
※ [현재] 대부업·대부중개업(0.1~0.5억원), 매입추심업(0.5억원), 수탁추심업(5억원) 적용 중 → [개선] 채무조정교섭업에도 적용 + 영업규모별로 금액 차등화

IV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1 기대효과

◇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**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(win-win)**하는 **선순환 구조** 형성

-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→ **사회적 비용 절감**
- 채권관리·회수체계에 **고객보호가치** 내재 → **채무자 재기·회수 증가**
- ‘추심’이라는 동일기능에 동일규율 적용 → **건전한 추심질서 정립**



2 향후계획

◇ 신속한 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 적극 추진

- 입법예고, 규제위·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('20.9~12월)
-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('20.9~12월)
- 「소비자신용법안」 국회 제출('21.1분기)

< 소비자신용법 조문체계 >

| 항목 | | 조문(§) | 내 용 | 주요 변경·신설 사항 | 조문이력 ¹⁾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총칙 | | 1~4 | 목적·정의·적용범위·타법관계 | 소비자신용 권리·의무 명확화 | 신설 |
| 소비자신용법 | 인가·등록 | 5~8 | 채권수탁추심업 허가, 영업양수도 | - | 신정 |
| | | 9·10 | 대부·대부중개·매입추심·교섭업 등록 |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| 대부·신설 |
| | | 11~13 | 등록업의 갱신·등록수수료·교육 | - | 대부 |
| | 소유·지배 | 14·15 | 임직원 자격요건·업무총괄사용인 | - | 대부·신정 |
| | | 16·17 | 대주주 변경승인·거래제한 | - | 대부·신정 |
| | 업무 | 18 | 다른 업무의 수행 제한 | 대부·중개업간 겸영만 허용 | 대부·신정 |
| | 19 | 총자산한도(레버리지) 제한 | 매입추심업 담보한도 신설 | 대부 | |
| | 20·21 | 상호·이용자보호기준 | - | 대부·신정 | |
| 채권생성·연체채권관리 | 대부계약 | 22·23 | 대부계약 체결방법·과잉대부금지 | - | 대부 |
| | | 24 | 이자율제한 | - | 대부 |
| | | 25~28 | 광고·대부중개제한 | - | 대부 |
| | 연체처리 | 29 |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 | 10일전 통지→채무조정신청可 | 신설 |
| | | 30 | 연체이자 부과제한 | 당초 만기미도래 원금에 부과금지 | 신설 |
| | 채권양도 | 31 | 양도제한 양수자·채권 범위 | 시효완성시 양도금지, 재매각제한 | 대부·신설 |
| | | 32 | 채권양도 예정통지 | 10일전 통지→채무조정신청可 | 신설 |
| | | 33 | 채권양도 절차 | 양수자선정방법, 사후감독의무 | 신설 |
| | | 34 | 채권양도 내부기준 | 자율마련→임직원 준수 | 신설 |
| | 채권추심 | 35 | 추심제한 대상채권 | 채권자변동정보 미등록시 추심금지 | 신설 |
| | | 36 | 추심연락 제한 | 추심빈도제한, 연락제한요청권 | 신설 |
| | | 37 | 주택경매 예정통지 | 10일전 통지→채무조정신청可 | 신설 |
| | 추심위탁 | 38 | 추심위탁제한 | 채무조정권한 위탁제한 | 신설 |
| | | 39 | 추심위탁 예정통지·절차 | 수탁자선정방법, 사후감독의무 | 신설 |
| | | 40 | 추심위탁 내부기준 | 자율마련→임직원 준수 | 신설 |
| | | 41~43 | 수탁추심업자·위임직추심 행위제한 | - | 신정 |
| | 채무조정 | 44 | 채무조정요청권 | 신청시 추심중단·답변의무 | 신설 |
| | | 45 | 채권금융기관의 응답 및 조정성립 | 내부기준 적합시 수락의무 | 신설 |
| | | 46 | 채무조정 내부기준 | 자율마련→심사시 적용 | 신설 |
| | | 47~50 | 채무조정 교섭업자 업무방법 | 설명 의무, 이해상충방지, 수수료제한 | 신설 |
| 소멸 | 51 | 소멸시효 완성 | 기준마련, 채무면제 간주 | 신설 | |
| 감독 | 협회 | 52~57 | 대부금융협회 | ※신정협회는 신정법 존치 | 대부 |
| | | 58·59 | 대부정책협의회·실태조사 | - | 대부 |
| | 검사·제재·벌칙 | 60~63, 72·74·75 | 검사·조치·벌칙 | - | 대부·신정 |
| | | 64 | 등록취소 거래종결 | - | 대부 |
| | | 65~67, 76 | 과징금·과태료 | - | 대부·신정 |
| | | 68 | 손해배상 | - | 대부·신정 |
| | | 69 | 법정손해배상 | 최대 300만원 법정손해배상 | 신설 |
| | | 70 | 영업보증금적립 | 영업보증금 외부적립의무 | 대부 |
| | | 71·73 | 권한위임·분쟁조정 | - | 대부·신정 |

1) '신정'은 「신용정보법», '대부'는 「대부업법」에서 각각 「소비자신용법」으로 이관 의미(일부 내용수정 有)

① 기한의 이익 상실

- 금융회사는 대출금 연체 후 일정기간(통상 30일, 주택담보대출은 60일) 도과시 기한이익상실 처리(채무자에 대해 7일전 사전통보)
-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상환의무가 발생하고,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가산

② 채권 회수를 위한 (위탁)추심

- 연체발생 즉시 유선·우편 등으로 변제촉촉(통상 위탁추심업체에 위탁) →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진행

③ 손실 확정을 위한 상각처리

- 통상 연체 후 1년(카드사의 경우 6개월) 시점에 부실채권을 '추정손실'로 분류하고 일정한 절차*를 거쳐 상각 처리
- * 분기마다 금감원 승인을 거쳐 상각 (예외: 1천만원 이하는 자체상각 가능)
- 상각 후 부실채권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(난외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), 법인세법상 손금산입

④ 부실채권 매각

- 민법(§449)상 채권 양·수도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채권 추심업자(대부업자), 자산관리자 등에 매각
- 부실채권 매수자는 일정기간 추심 이후 재매각하는 것이 일반적

⑤ 소멸시효 관리 : 통상적으로 연장

- 소멸시효(5년) 완성 2~5개월 전 시효 도래자 조회 후, 법원에 지급명령*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연장(10년: 당초 5년 → 15년)

* 간소화된 독촉절차, 2주간 채무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

1. 개별 소비자신용법 제정 : 영미계

- ① (미국) 일반 소비자신용법*(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1968)과 채무조정업 규율법(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 2005)으로 2원화

*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시, 공정한 채권추심,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등으로 세분화

- ② (영국 : Consumer Credit Act 1974) 금전대부(Credit Agreement) 및 판매신용(Hire Agreement)과 관련한 대출계약 사항, 연체발생시 처리절차, 분쟁해결 절차 등 규율

○ 관련업자(대출금융회사, 판매신용기관, 모집·중개, 채무조정 및 추심업자 등)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율 규정

- ③ (호주 :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2009)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하며 Hardship Variation*이라는 고유의 채무조정 절차 규정

*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할 의무 → 협상결렬시 제3자 중재기구(ADR)의 중재에 따르게 됨

- ④ (뉴질랜드 :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)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만든 법으로 호주법과 상당부분 유사

○ '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해 금융채무자 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여* 채무자 보호 강화

*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,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전체에 대한 가산이자 금지 등

2. 일반법 내 소비자신용 특칙 운영 : 유럽

- ① (독일 : 민법상 소비자대차 章) 소비자신용법을 1990년 제정(1991년 시행) 후 2002년 민법에 통합한 것으로 영미권과 규율범위 유사

- ② (프랑스 : 소비자법 상 소비자신용 章) 과채무 해결을 위한 방법 및 비영리상담기구 등 소비자신용 단체 이용방법 안내(1978년 제정)

3. 민법상 채권자-채무자 일반론 적용 : 한국, 일본 등

| 구분 | 미국 | 영국 | 호주 | 독일 | 프랑스 |
|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|---|
| 법적 근거 | UDMSA (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) | CCA (Credit Consumer Act) | NCCA (National Consumer Credit Act) | 민법 연방사회부조법 | 통화금융법 |
| 업종 명칭 | Debt Management, Debt Settlement | Debt Adjusting, Debt Counseling | Debt Agreement administrator | 채무자 조언기관 | 중재인 |
| 진입 규제 | 등록(비영리단체) 인가(영리단체) ※ 일부 州는 전면인가제 | 등록(비영리단체) 인가(영리업자) | 인가(영리업자) | 등록 (비영리단체) | 채권자가 채무조정시 중재인 선임 의무화 |
| 외부 조정 기구 | 無 | 無 | 無 | 無 | 과채무위원회 |
| 조정 방식 | 1:1 조정 (복수채권자 조정시 개별동의 필요) | 1:1 조정 (복수채권자 조정시 개별동의 필요) | 1:1 조정 (복수채권자 조정시 개별동의 필요) | 다자 간 동시조정 (채권자 과반수 동의필요) | 1:1 조정 (다자 간 조정희망시 과채무위원회 이용) |
| 업자 역할 |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|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|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|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|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|
| 서비스 비용 |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수수료수취 (비영리단체 비용이 보다 저렴) |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수수료수취 (비영리단체 비용이 보다 저렴) |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수수료수취 (단, 정부재정 지원 받는 무료 신용상담업체 별도 존재) | 채권자 or 채무자 수수료수준 법정화 (단, 정부재정 지원 받는 무료 신용상담업체 별도 존재) | 무상중재 (다만, 구속력 없고 채무조정은 주로 과채무위원회 이용) |
| 법원 제도와 관계 | 법원 제도와 병존 | 법원 제도와 병존 | 법원 제도와 병존 | 파산의 전치절차 | 법원 제도, 과채무위원회와 병존 |